



오바마 대통령,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김세중 선임연구원

■ 9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증대와 지출삭감을 통한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했으며, 감축안의 절반인 1조 5,000억 달러는 세수증대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1조 5,000억 달러의 세수 증대안에는 조지 W.부시 대통령 당시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 적용했던 감세 혜택을 폐지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약 8,000억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이 포함됨.
- 또한, 석유와 가스회사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도 폐지되며, 지출삭감 방안으로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에서 약 2,500억 달러를 감축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통해 1조 달러를 감축할 방침임.

■ 이번 재정적자 감축안에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방안으로 부유층 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버핏세’도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화당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됨.

-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자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아 자본소득이 많은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버핏세’는 연 소득이 1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부유층에게 세율 하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이는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되도록 하기 위함임.
-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직후 공화당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의 제안을 계급투쟁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공화당측은 부유층 증세가 투자위축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번 재정적자 감축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Wall Street Journal 등, 9/18)